

‘돌아온 이낙연’ 내년 총선 역할 주목

美 연수 마치고 1년만에 귀국

이낙연 “뭣 다한 책임 다하겠다” 이재명 “어려운 시국... 힘 합쳐야” 박지원 “당 단합·강한 야당 재탄생” 국힘 “반갑지 않은 손님” 평가절하

미국 연수를 마치고 1년 만에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이를 의식한듯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아무리 엉망이라 한들, ‘이낙연 전 총리’가 대체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산’이라며 이 전 대표의 귀국을 평가절하하는 등 견제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귀국 당일 이 전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다.

당 단합과 강한 야당을 만드는 구심점이 돼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북에 “이 전 대표의 귀국을 환영한다. 도착 메시지도 좋았고 많은 지지자들의 질서있는 환영 행사도 일품이었다”며 “단합과 강한 야당으로의 재탄생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의 최대 개혁과 혁신

신은 단합과 강한 야당이 되는 것이다. 단합, 강한 야당이 내년 총선 승리의 길”이라며 “개팔, 낙팔, 수박을 추방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적극적인 역할론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저의 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치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가 “대한민국이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내년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분간은 대학강연이나 북콘서트 등을 열어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에 나서면 당 분열을 야기하는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를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직격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 ‘뭣 다한 책임’ 이야기 전에 문(文) 정권과 민주당 잘못에 반성문부터 쓰라”고 비판했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금의환향하듯 돌아온 이낙연 전 총리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기억하는 국민 입장에서 그저 ‘반갑지 않은 손님’일뿐”이라며 “누더기 부동산 정책과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권의 술한 무능과 실정에서 이 전 총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내년 총선 ‘올드보이’ 귀환 우려

박지원·천정배·정동영 등 준비장경태 “그 분들 역할 꼭 선거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치권 ‘올드보이’들의 내년 총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뉴스 킵 박지훈입니대에 출연해 “본인(다선 전직의원)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계산 것 같지만, 그게 꼭 선거를 리는 없다고 본다”고 내년 총선 출마에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옛 다선 의원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전직 의원들의 총선 출마 소식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읽힌다.

이들의 귀환은 야권 내 ‘인물난’을 반영한 것이지만, 당 쇄신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여기에 당 혁신위원회는 당내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직

의원들이 국회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혁신위에서는 ‘3선 이상 동일 지역 출마 제한’ 등의 기득권 혁파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4선)이 목표 혹은 고향 진도가 있는 해남·완도·진도로 출마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6선)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4선)은 각각 광주 서구를, 전북 전주병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전 의원(6선)과 이석현 전 의원(6선)은 각각 대전 서구갑,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에 도전할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최근 들어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5선)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출마 여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천천히 여쭙 달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권, 日 오염수 방류 장외투쟁 ‘총력전’

민주, 내달 1일 규탄 범국민대회 정의, 국제적 연대·네트워크 구성

야당이 오는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장외투쟁과 현장방문을 이어가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1일 서울 남대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100만명 달성을 기념한 보고대회를 열고 7월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7개 시·도당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전국 252개 지역위원회에서 대국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해왔다”며 “그 결과 어제 서명운동 돌입 23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7월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에서 총집결해 대규모 규탄보고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7월 한 달 동안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는 정부가 진행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일 브리핑’에 대한 대응책으로 ‘1일 1질문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삭발을 한 뒤, 지난 20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정의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현장 등을 방문했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은미 의원 등은 지난 22일 일본 시민당과 공동으로 도쿄전력을 항의 방문했다.

이원내수석부대표는 “정의당을 비롯한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일본의 시민당뿐만 아니라 핵을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단장인 강 의원 등은 지난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원전 내 오염수 보관탱크와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을 둘러봤다. 또 방류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도쿄전력 측에 전달했다.

강 의원은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육상 장기 보관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해양투기 계획을 철저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일본 내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원전제로 재생에너지100 의원 모임과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방사능 전문가와 일본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오섭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25일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원 범위가 불명확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초중고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



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무상 급식이 확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고졸가 등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천원의 밥상 지원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6·25 73주년 논평

여야는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해한 목소리로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의 희생을 추모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날의 포성은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았다”며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또다시 위협받는 상황에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안보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적절한 예우를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토대 위에 살아가는 남은 자들의 도리일 것”이라며 “22개국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추모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평화는 결코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대화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평화는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적대와 대치를 끝내고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고

립을 자초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6·25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분단의 아픔을 낳았으며 고향,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다”며 “6·25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뼈아픈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6·25전쟁을 기억하며 한반도 평화란 단어의 무거움을 다시금 되새긴다”며 “특정 국가와의 군사적 동맹으로, 강대국 외교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